

大學入試制 變遷과 새 제도의 考察

朴 道 淳
(高麗大 敎育學科)

1. 大學入試制度의 變遷過程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시험 제도는 대학교육의 이념과 성격의 변화에 따라 변천해 왔다고 보려는 대학교육의 수요 과다에서 빚어진 과열 경쟁과 그로 인해 야기된 敎育 및 社會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빈번하게 변화해 왔다. 여기에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대학 입학 시험 제도 변천 과정을 개괄하고 왜 입학 시험 제도가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 大學別 單獨 試驗期(1945~1953)

이 시기는 대학별 단독 시험제로서 대학이 주체적·자율적으로 대학교육 適格者를 선발한 시기였다.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되자 대학 입시에 관련된 사항은 대학 당국에 일임하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대학 당국끼리 協定 형식으로 시험 과목·시기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시험 시기는 전·후기로 나누었으며 시험 과목은 국어·영어·수학·사회의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1과목 이상을 부과하였고, 이때 실업계 동계 진학자는 교과서에서 이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였다. 또한 구 5년제 졸업자에게 조건부 입학울 시켜 입학 이후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정규 학생으로 편입시켰고, 以北 학교 출신자는 이북 5도지사의 증명으로 입학울 허가하였다.

특히 6·25 이후에는 입학·등록금 면제의 특혜를 부여하였다. 이 시기에 특기할 것은 초기에 입학 자격자(중학 6년 과정 졸업자) 절대 부족으로 정원 미달 현상이 생겼고, 후기에 정원 초과 모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입학 시험 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무자격자에 대한 입학 허가와 6·25 이후 병역 특전에 따른 부정 입학이 성행한 것이었다. 결국 부정 입학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대학 입학 시험의 公共性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大入 國家聯合考查·大學別 考查 並行期(1954)

이 시기에는 대학의 부조리 제거와 입학 시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의도 하에 대학 입학 국가 연합고사를 도입하여 대학별 고사와 병행 실시하였다. 이 기간에 대학 입학 국가 연합고사는 대학 정원의 140%를 합격시키는 자격고사 형태로 주어졌다. 또한 특별 전형으로 여학생과 군 제대자에게 연합고사 면제의 특혜를 주었고, 국가 연합고사에서 실업계 대학 진학 희망자 중 입학 정원의 20%까지 추가 선발하여 동일계 대학 진학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북 학교 출신자 특전은 폐지되었다. 국가 연합

고사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국어·영어·수학·사회생활, 선택 과목으로 과학 또는 실업이 부과되었다. 대학별 고사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국어·영어·수학, 선택 과목으로 1과목이 부과되었으며, 전·후기 모집 및 추가 모집으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에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여학생과 제대자에 대한 입시 특혜의 부당성이 제기된 것과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 자유 경쟁 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의문이 크게 제기되어 대통령의 지시로 단 한 해 동안만 운용되었다.

3) 大學別 單獨 試驗期(1955~1961)

이 시기에는 국가 연합고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제도가 폐기되고 대학별 유시험·무시험제가 병행되었다. 즉,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원칙 아래 내신 제도의 실시를 권장하고, 각 대학에서는 입학 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하거나 또는 내신 성적과 대학별 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하였다. 1958년도 이후에 일부 국·공립대학에서는 입학 정원의 10%는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90%는 대학별 고사와 내신 성적(30% 반영)으로 선발하였다.

시험 시기는 여전히 전·후기 및 추가 모집으로 하였고 시험 과목은 필수 4과목 이상(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선택 1과목 이상으로 하여 가급적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전 과목을 전형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1958년 이후는 필수 과목만으로 전형하되 그 과목을 매년 변경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1960년에는 서울대, 1961년에는 延世大와 梨花女大가 진학 적성 검사를 전형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고, 연세대는 상판회귀법을 이용하여 전 신입생을 사정하기도 하였다. 특별 전형으로 여자, 제대 군인에 한하여 정원의 10% 내에서 초과 모집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 제도는 무시험 전형에서 내신제를 처음으로 활용하여 전인적 평가를 중시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였지만, 대학간 학력 격차와 정원의 초과 모집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고 특정 교과에 대한 시험으로

고교교육의 비정상화 문제도 심각히 제기되었다.

4) 大入資格 國家考査期(1962~1963)

이 시기에는 부정 입학과 무능력자의 입학을 막고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대학별 고사 겸 선발고사의 성격을 띤 대학 입학 자격 국가고사를 실시하였다. 이 고사의 결과는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실기고사, 신체검사, 면접 등의 결과와 함께 전형 자료로 사용되었다. 즉, 1962년도에는 학과별·과목별 국가자격고사 성적과 대학별 실기고사 성적으로 일반 전형을 하였고, 서류 심사와 대학 적성검사(실업 동일계 진학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에 의해 특별 전형을 하였다. 1963년도에는 국가고사로 대학 입학 자격자만 결정하고 대학별 선발 고사에 의해 입학 사정을 하였다. 또한 특별 전형의 대학 적성검사를 폐지하여 예·체능계 무시험 서류 전형, 동계 실업고교 출신자의 정원의 30% 선발, 여자의 경우 사범계 및 실업계 대학 진학시 특혜를 주었다. 시험 과목은 1962년도에 필수로 국어 I, 사회(일반사회·도덕·국사), 수학 I, 과학(물리·화학·생물·지학), 영어, 실업(가정)을 부과하였고 선택 과목은 계열별로 1과목씩 부과하였다. 그러나 1963년도에는 필수 6개 과목만을 부과하였다. 이 제도는 대학간 학력차를 노출시키고, 정원 미달 사태의 발생과 학과 간의 극심한 성적차와 우수 학생의 탈락, 그리고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5) 大學別 單獨 試驗期(1964~1968)

이 시기에는 대학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 아래 대학별 단독 시험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내신 성적과 진학 적성검사를 대학 입학 전형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예·체능계 특기자 및 과학 특기자를 입학 정원 내에서 총·학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형하였고 실업계 대학 동계 진학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입시 정책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대학별로 고사 원

칙이 다양하였고 시험 시기도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까지 다양화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학간 입학 시험 기준의 격차가 심하고, 정원 초과 모점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 대학간 격차의 심화와 고등 실업자 양산, 그리고 고교교육의 비정상화가 가중된다는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었다.

6) 大入 豫備考査・大學別 考査 並行期
(1969~1980)

이 시기에는 대학 적격자 선발로 대학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학의 불합리한 입시 관리를 지양하며 대학간 질적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 아래 초기에는 자격고사에 합격한 사람만이 대학별 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후기에 들어서서는('79~'80) 내신 성적까지도 입학 전형에 반영하였다. 1971년에는 예비고사 합격자 수를 정원의 150%로 하였다가 1972년부터 180~200%로 바꾸었다. 이 기간에는 입학 사정 유형이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전형하는 경우, 예비고사 성적·고교 내신 성적·대학별 고사 성적으로 전형하는 경우, 예비고사 성적과 대학별 고사 성적으로, 예비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으로 전형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였다. 특별 전형도 '69~'73년까지는 교대, 사대, 농과계에서 도시 지역 출신자와 근무 희망자를 정원의 10% 범위에서 특별 전형하였고, 1974년도에는 예·체능계 특별 전형도 생겨났다. 1976년도에는 외국인, 교포 등에게 예비고사 면제 혜택이 주어졌고, 1980년에는 농·공·상·해양계와 산업체 근무자, 체육고 출신자에 대한 특별 전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예비고사 과목은 '69~'71년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실업(가정)이었고, 1972년에는 국사 과목이 추가되었으며, 1976년에는 제2외국어 선택 과목에 일본어를 추가하였다. 대학별 고사 과목은 학교에 따라 다르나 주로 국어·영어·수학을 택하였다. 이 제도는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에 따른 학생의 수험 부담이 가중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 성행하여 교권이 실추되며 재수생이 누적된다는 사회적 문제를 크게 야기시켰다.

7) 大入 豫備考査・高校內申 並行期(1981)

이 시기에는 과열 과외의 해소,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의 이중 부담 경감, 고교 생활 지도의 개선이라는 취지 아래 대학 입학 예비고사 성적(50% 이상)과 고교 내신 성적(20% 이상)에 의해서 입학 전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체능계의 경우, 입시 총점의 20% 내에서 실기고사 성적을 포함하여 사정하였고 예·체능 특기자, 실업계 대학 동계 진학자, 산업체 근로자를 특별 전형하였다. 시험 과목은 고교 전 교육과정에서 14개 교과를 포함하였으며, 시험 형태는 선시험 후지원이었다. 이때에는 졸업 정원의 30%를 추가 선발하였고, 전기대 합격과 관계없이 후기대학 응시가 가능하였으며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고교 교육 정상화 및 교사 지위 향상 그리고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가속화와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대학별 고사 폐지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8) 大入 學力考査・高校內申 並行期
(1982~1985)

이 시기에는 대학 입학 예비고사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점을 감안하고(총 응시자의 90%가 합격), 무제한 복수 지원으로 인한 정원 미달 사태를 해소하며,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의 이중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취지 아래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비율을 확대하고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대학 입학 학력고사로 변경하여 합격선을 폐지함으로써 대학 입학 학력고사(50% 이상)와 고교 내신 성적(30% 이상)에 의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시험 과목은 '82~'83년도에는 14개 교과목, 1984년도에는 15개 교과목, 1985년도에는 인문계 16개 교과목, 자연계 15개 교과목으로 실시하였고 예·체능계 실기고사를 병과하였다. 1982년도에는 2개교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1983년도 이후 1개교 지원을 의무화하였다. 이 제도는 학력고사의 난이도,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 고등 정신 능력 측정 미흡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9) 大入 學力考査・高校内申 및 論述考査 並行期(1986~1987)

이 시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부분적으로나마 확보하고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의 측정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학력고사(50% 이상), 내신 성적(30% 이상) 그리고 논술고사(10% 이내) 성적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시험 과목을 1987년도에 9개 과목으로 크게 축소하였고,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변경(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하였으며, 논술고사는 탈교과적·범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창의력·질문력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적성을 무시한 합격 위주 지원, 논술고사 기능의 미흡, 대학의 학생 선발권 제한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10) 大入 學力考査・内申成績 및 面接 並行期 (1988~현재)

이 시기에는 출제의 일관성 및 전문화를 통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선발의 전형 기회를 확대하며 눈치·배짱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 아래 대학 입학 학력고사(9개 과목)를 전기·후기·전문대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선지원 후시험제 도입) 면접 고사 성적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예·체능계는 실기고사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2. 大入 試驗制度 變遷過程에서 나타난 問題點

이러한 입시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초기에는 대학이 주체가 되어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입시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었으나, 점차 대학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과열 입시 경쟁이 촉발되면서 대학 입시의 공공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감독이 강화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학 입학 시험에 있어서도 國家 介入과 關與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그 주체가 대학에서 국가로 옮겨지게 되었다. 즉, 대학 입시의 기본 골격이 대학별 단

독 시험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고사와 대학별 고사를 번갈아 실시하거나 병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 1981년부터는 대학별 고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학 입시가 국가 주도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대학 입시를 둘러싼 교육·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대학 입시의 선발 기능이 社會的 選拔機能으로 연결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즉, 대학 입학이 사회적 지위 상승이나 입신 출세의 기회를 획득하게 되는 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학 교육의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과열 입시 경쟁이 촉발되었다. 그리고 과열 입시 경쟁으로 대학 입시가 사회 가치 규범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대학 입시의 공공성의 본질이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대학이 대학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하는 주체로서 독자적인 자율권을 행사하는 데 충분한 자치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대학 입시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지나친 관여를 자초하게 되었다. 대학 입시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보면 대학별 단독 시험제가 수차례 걸쳐 국가고사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열 입시 경쟁으로 학생, 학부모 그리고 사회 전체가 대학 입시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 속에서 정작 대학 입시의 주체인 대학이 이를 소홀히 관리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즉,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교육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부정 입학·정원 초과 모집 등 대학 입시를 둘러싼 대학의 비리나 교육 기회 형평성 및 공정성의 보장을 저해함으로써 대학 입시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학이 대학별 단독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생 선발의 기준 설정이나 고사 출제 등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고등학교 교육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이 비정상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학 입시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하려는 의도로 국가고시제가 채택되어 왔다. 결국 대학 입시 제도의 변천

사가 대학에 주는 교훈은 대학이 독자성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多樣性을 견지하는 동시에 학생 선발의 自律權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대학별 단독 시험제 하에서도 대학 입시의 본질이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였지만, 국가고시제 하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다. 국가고사제의 의의는 국가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해 주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고사들은 출제와 운영의 편의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가고사로서의 계 기능과 의의를 살리지 못하였다. 즉, 대학 입시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고사들이 객관식 일변도의 출제로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력을 측정하는 데는 효율적이었지만, 대학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크게 미흡하였다. 또한 이러한 출제 경향은 고등학교 교육이 지식 암기 위주의 시험 준비 교육으로 전향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국가고사가 대학 입학 적격자의 예비 선발적인 기능을 가질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 고사의 결과가 학생 선발의 주 전형 자료로 활용되었을 때는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3. 새 入試制度的 概要

새 입시 제도가 어떤 모양으로 확정될는지 필자가 이 글을 쓴 시점에서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새 입시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이 무엇이며, 그 기본 골격이 1991년 4월 1일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사회적 발달 과정이나 대학생 수 및 성장 정도로 보아 '대중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 입시 제도의 이념도 '절충주의적'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입시 제도에서 강조되어야 할 원칙도 '다양성', '자율성', '공공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대학 입시 제도의 기본 방향을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 입학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 제고, 중등 교육 정상화에의

기여, 대학의 자율성 신장, 그리고 대학 입시의 공공성 신장 등을 입시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네 항목은 입시 제도의 기본 방향일 뿐만 아니라 개선의 원칙이며 개선의 이유도 된다.

새 입시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 입시를 궁극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되 제 1 단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 대학별 고사(전공 기초시험, 실기 및 실험, 면접, 구술시험 등)의 실시, 그리고 고교 내신 비중의 강화 및 영역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基本骨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반드시 40% 이상 반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택 여부·반영 비율·반영 방법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학별 고사의 경우도 실시 여부·고사 과목의 수·내용·반영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본 골격은 근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신장하면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大學修學能力試驗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학교육 수학에 필요한 학업 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합 교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로 규정하고, 시험 영역을 교과별 분류가 아닌 측정 영역별 분류로서 언어, 수리·탐구, 그리고 영어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시험은 국가 수준의 전문 기관에서 출제하고, 행정 기관에서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高校內申制의 比重強化와 評價領域의 擴大

새 입시 제도에서는 현행 내신 성적의 비율을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였고, 현재 내신 성적 산출 영역이 교과 성적과 출석 성적(90:10)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교과 성적, 출석 성적, 행동 발

달 상황·특별·교내외 봉사 활동 성적(80 : 10 : 10)으로 그 영역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최종 입시 사정에서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율을 현재의 약 4.9%에서 10% 이상(30% 반영할 경우)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

4) 大學別 考查의 實施

새 입시 제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고교 내신 성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대학의 건학 이념과 계열 또는 학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학별 고사에는 전공기초시험, 실기 및 실험고사, 면접과 구술고사, 신체검사 그리고 특별 전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공기초시험의 경우 채택 여부, 출제 과목의 종류, 출제 방법, 그리고 반영 비율은 원칙적으로 대학이 결정하도록 하고, 출제 방법은 전문 기구의 평가 문항을 활용하거나 대학간 연합 공동 출제 또는 대학 단독 출제 등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공기초시험의 과목 수는 3개 과목 이내로 할 것을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신체검사는 대학교육 수행에 장애 요인이 없는 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5) 銓衡節次

전형 절차는 대학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입학 사정 자료로 활용할 경우는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후(선시험) 그 결과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지원 대학에 제출하고, 지원 대학의 선발 요강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치러야 할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두 가지 전형 자료의 제출로 끝나게 되어 있다.

만약 대학능력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지원 대학에 제출한 후(선지원) 지원 대학의 선발 요강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치르거나(후시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신 자료의 제출로 끝나게 되어 있다.

6) 特別銓衡의 擴大

새 입시 제도에서는 현행의 예·체능 분야에 국한된 특기자 대상 영역을 문학·어학·수학·과학 등 다른 분야에서의 특수 계능 보유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특별 전형 대상자도 별도로 마련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소 기준에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득점자(전체의 0.5% 이내)이면서 내신 등급 1등급인 자는 특별 전형이 가능하다.

4. 새 入試制度에 대한 考察

새 입시 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는 첫째로 기본 입장, 방향 및 기본 골격, 둘째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 셋째로 고등학교 내신 제도, 넷째로 대학별 고사의 실시, 다섯째로 전형 절차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새 입시 제도가 '94 학년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항목별로 문제점과 대책을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1) 새 入試制度의 基本方向 및 基本骨格에 대한 考察

새 입시 제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의 성격과 이념을 규정하고 입시 제도 수립의 원칙을 확인한 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에는 그 절차나 고려해야 할 측면, 그리고 방향에 관한 큰 이의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적격자 선발', '고교 정상화', '대학 자율성 신장', '공공성 신장'의 네 측면이 모두 고려된 입시 제도를 구안할 것인지, 어느 한 측면만을 고려할 것인지 또는 이 가운데 어떤 측면에 크게 우선권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본 방향의 우선 순위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어떤 특정 방향(예컨대 '고교 정상화')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 기본 골격은 물론 입시 제도 전체의 모습과 그 구체적인 전형 방안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적어도 새 입시 제도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신장'에 가장 우선 순위가 주어졌고, '고교 정상화'와 '적격자 선

발' 그리고 '공공성 신장'의 순으로 우선 순위가 주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새 입시 제도에서는 어떤 특정한 방향만이 아닌 네 가지 기본 방향 모두를 부분적으로 달성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본 골격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 신장이고 그 다음에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별 고사' 등에 대한 모든 결정을 대학에 일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입시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대학에 일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높이고 그 실질 반영 비율을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의 방향이 강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大學修學能力試驗에 대한 考察

새 입시 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요한 전형 자료의 하나로서 제시한 것은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 재고'라는 기본 방향을 달성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이 '입시 제도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고교교육의 교육 내용을 선도하려는 목적도 다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개념이 '학력고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과 이 시험이 의도한 기본 방향인 '적격자 선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기관, 인원, 재정적 뒷받침 등의 실제적인 지원 조치가 정부 수준에서 얼마나 확고한가와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얼마나 지속적으로 연구·실험·검증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또한 이 시험이 실시될 경우 초래될지 모를 부작용, 예컨대 수험생의 입시 부담 과중(?)이나 과열 과의 혹은 특정 과목(국·영·수)의 편중 현상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근원적으로 수험생의 수험 부담은 제도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대학 정원의 需給과 관련된 것이고, 국·영·수 치중이나 적격자 선발 기능의 유효성 문제는 출제 문제의 내용과 질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3) 高校內申制에 대한 考察

새 입시 제도에서 고등학교 내신제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유도하면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학 자율성 신장'에 상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고 실질 반영 비율을 높인 것은 어떤 전형 자료보다도 고교 내신 성적이 '적격자 선발'에 가장 효과적이며, 대학별 고사에서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교과목의 균형적인 운영과 지도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내신 성적 산출 영역을 소위 '전인교육'으로 확대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에서 행동 발달 상황, 특활, 교내·외 봉사 활동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변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신 성적이 '상대평가'로 이루어짐에 따라 생기는 지역차·학교차의 문제와 교육의 場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경쟁과 불신 그리고 평가 방법의 공정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역차·학교차의 문제는 '교육 기회의 균등화'라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평정 방법과 경쟁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고교 교사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교 교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가능하다면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학점제' 등 다른 방안의 강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학교 여건, 특히 교사에 대한 국민(특히 학부모)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4) 大學別 考査에 대한 考察

새 입시 제도에서 대학별 고사(전공기초시험)에 대한 제안은 근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것이며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주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건학 이념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입시 전형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대학별 고사의 도입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학별·계열별 또는 학과별로 매우 다른 시험이 있게 될 경우 학생의 학교 선택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자료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중등교육이 입시 과목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학교별 또는 학과별 입시반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별 진공기초시험의 문제가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를 벗어나 어려워질 경우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극심한 과열 과의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간·계열간 협의 과정이나 문제 출제 방법의 전문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 각 대학의 능력과 자율 의지가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 그리고 대학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하는 점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5) 銜節次에 대한 考察

새 입시 제도에서의 전형 절차는 대학이 어떤 전형 자료를 활용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형 자료의 하나로 활용할 경우 부분적으로 '선시험'이 되기 때문에 파생되는 학생의 눈치 지원, 대학의 '수학능력 우수자'의 유치 경쟁, '수학능력'에 의한 대학 서열화 현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시험'은 그 나름대로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우선 대학의 자율적 입시 제도를 궁극적인 목표로 할 때는 시험은 어차피 '선시험'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학생에게 수험 기회를 다양화하는 데에도 '선시험'은 불가피해진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생의 '눈치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는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는 자료를 얻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고, '대학수학능력'이라는 단일 전형 자료에서의 우수자가 대학 수학 능력 우수자라는 등식은 성립되기 어렵다고도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채택할 경우라도 '대학별 고사'

를 실시할 경우 완전한 '선시험'이 아닌 '선시험'과 '선지원'의 복합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선시험'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는 고등학교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의 서열화 현상을 없앨 수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전형 자료'의 채택 여부가 대학에 일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지원'이나 '선시험'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어떤 유형의 전형 절차를 택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은 대학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6) 特別銜衡에 대한 考察

새 입시 제도에서 특별 전형 대상의 확대는 근본적으로 우수 재능 보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은 예·체능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우수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기회 균등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혜택 범위의 확대는 국가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해소하여 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형에서 논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특별 전형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또한 특별 전형 대상 영역도 중요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별 전형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5. 맺는 말

새 입시 제도는 여러 이해 관계 집단의 이해 관계와 한국의 현실을 보는 시각의 차이, 입시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의 종류,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본 입장(교육관)의 차이 때문에 그 공통적인 요소를 찾는 일이 매우 어렵다. 특히, 장기간 변화되지 않을 입시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감정에 따라 입시 제도는 계속 수정·보완되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 대학과 고등학교에 대한 신뢰는 입시 제도 개선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社會正義가 제대로 구현된다면 입시 제도의 문제는 매우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진학 희망자와 대학의 수용 능력 간의 차이가 해소된다면(그것이 국민 의식의 전환에 의한 해소이건 수용 능력 확대에 의한 해소이건) 아마도 입시 제도에 대한 논의 자

체가 그 의미를 상실할지도 모르며, 특히 국가 차원의 입시 제도 개선은 논의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끝으로 입시 제도를 비롯한 모든 교육 제도나 정책에서 관계자 및 국민의 의사를 수렴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결과에 의해 제도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의견은 교육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이해 관계에 직결되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